

Deloitte Insights

September 2025



불확실성 시대의 세무 대응 전략

2025 글로벌 조세정책 서베이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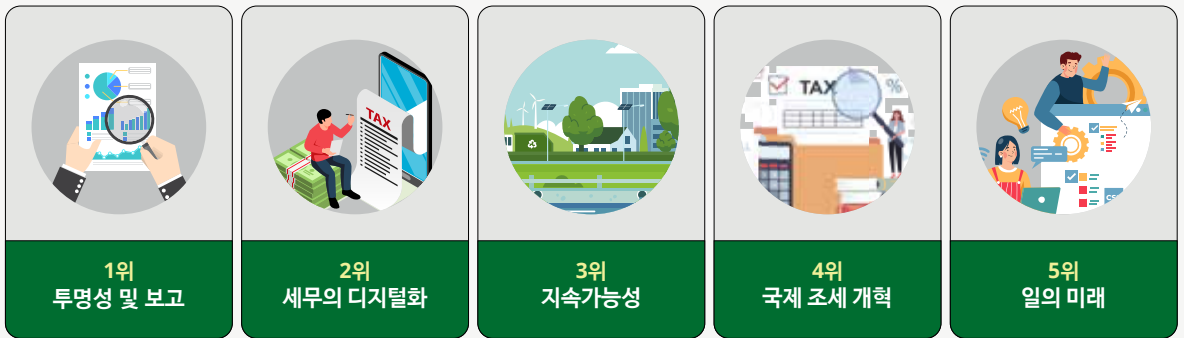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요약	3
01. 투명성 및 보고	9
02. 세무의 디지털화	14
03. 지속가능성	18
04. 국제 조세 개혁	22
05. 일의 미래	28
결론: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	32
연구 개요	33

요약

2025 글로벌 조세정책 서베이는 조세 환경을 재편하는 다섯 가지 글로벌 정책 주제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부상하는 주요 현안들을 분석하였다. 서베이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다섯 가지 주제가 자사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순위를 매겼다.



2024년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투명성 및 보고와 세무의 디지털화가 응답자들의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주제별 순위 변화가 있었다. 지속가능성은 지난해 5위에서 3위로 순위가 크게 상승하며 국제 조세 개혁과 일의 미래를 앞질렀다.

2025년은 글로벌 조세정책 환경에서 전례 없는 변화와 높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해이다. 그러나 이번 서베이에서 이미 제도적으로 자리 잡은 글로벌 세무정책 프로세스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되는 영역 또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업과 정책 담당자는 기존의 과제를 관리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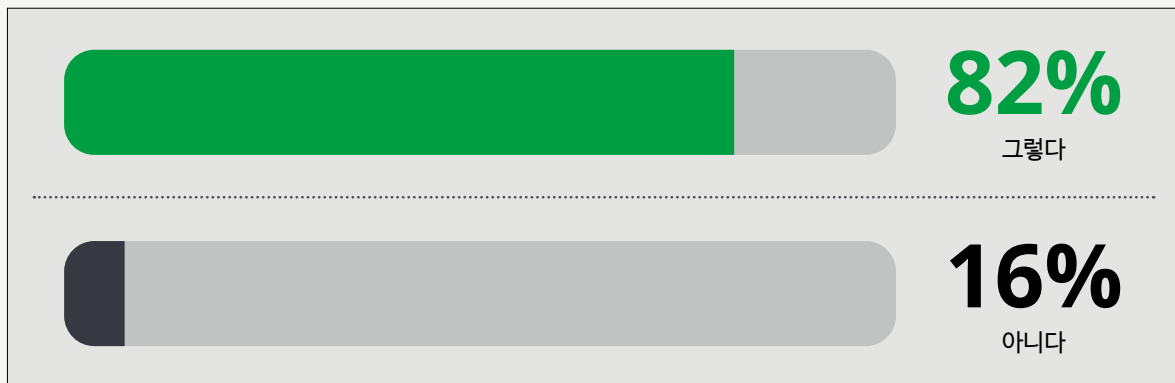


01. 투명성 및 보고

글로벌 세무정책 환경은 여전히 '투명성 및 보고'(Transparency and Reporting)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2024년과 마찬가지로, 이 주제를 다섯 가지 글로벌 정책 주제 중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꼽았다.

향후 2~3년간 공공 세무 공시 수준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전망은, 이 주제가 앞으로도 세무정책 논의의 핵심에 자리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 영역의 영향력은 공개 국가별 보고(public country-by-country reporting),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보고를 포함한 의무적 공시 제도 뿐 아니라, 자발적 공시 활동에 의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옴니버스 I (Omnibus I) 입법안에서 지속가능성 보고 요건의 대폭 간소화를 발표하기 이전에 실시되었다. 따라서 2026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향후 2~3년 내 세무 공시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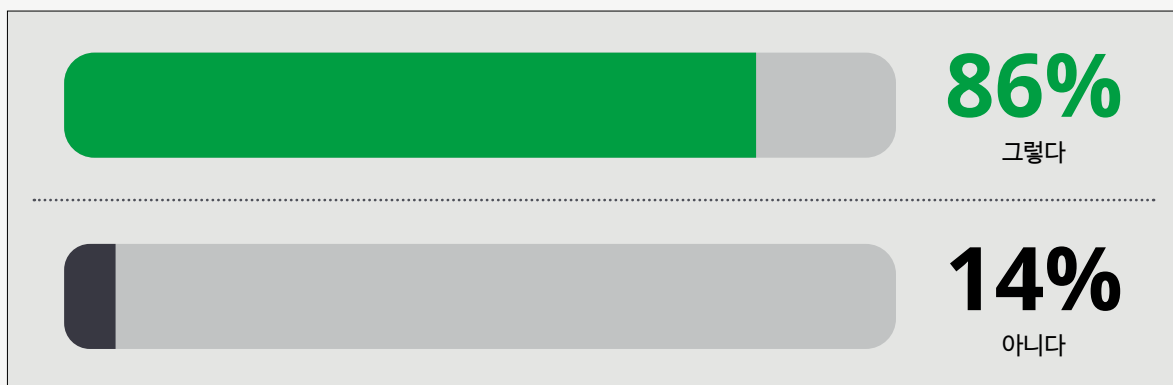
기업들은 여전히 세무 투명성 전략 실행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내부 세무 거버넌스와 외부 공시 간의 정합성 유지를 주요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02. 세무의 디지털화

각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세무행정 3.0(Tax Administration 3.0) 모델, 즉 현대적이고 디지털화된 세무행정 도입을 향해 지속적으로 진전하고 있다. 2025년 응답자 중 '의미 있는 진전'(significant movement)을 체감했다는 비율은 2024년보다 높게 나타났다.

세무행정 3.0의 도입의 가장 큰 효과로 세무당국과의 협력적 관계 강화가 꼽혔고, 이어 고객 서비스 개선이 꼽혔다. 그러나 동시에 비용과 복잡성 증가라는 도전 과제도 수반된다

세무행정 3.0 도입 진전 현황



전자세금계산서와 같은 자동화 프로세스가 오히려 복잡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되고 있다. 2025년 서베이 응답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의 주요 장점으로 '더 간단한 세무 준수'를 꼽았으나, 2024년에 비해 이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은 줄었다. 반면, 세무 준수의 복잡성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비율은 더 높아졌다. 결국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과 방대한 데이터를 다루는 영역에서 준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기술 활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AI 기반 세무 준수 시스템 개발도 지속적으로 진전되고 있다. 다만 시스템의 개발은 정확성과 규제 준수 측면에서 잠재적 이점을 제공하지만,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서는 기대가 약화되고 있다. 이는 연간 세무 준수 비용이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에 상당한 초기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세무 분야에서의 AI 논의는 종종 '활용 방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제는 AI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을지, 그리고 그 방식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확산되고 있다.

03. 지속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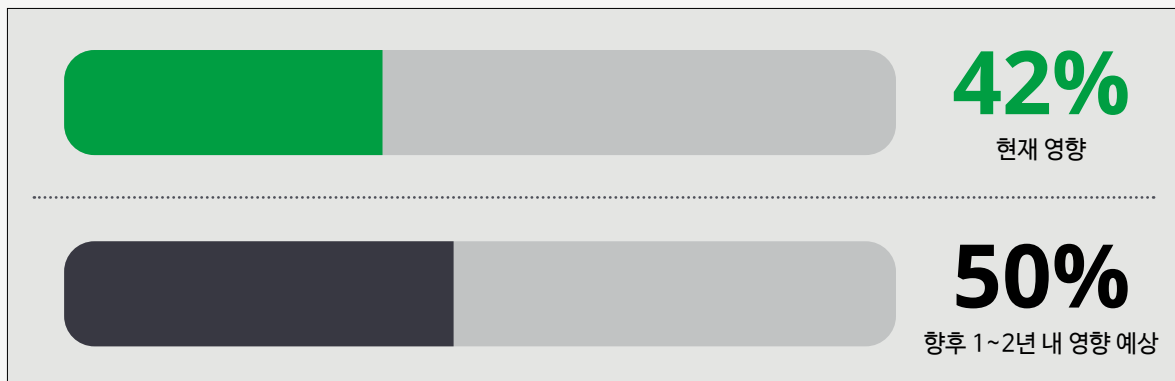
지속가능성의 순위는 2024년 5위에서 3위로 상승했으며,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이를 자사 비즈니스의 핵심 과제로 인식했다. 주요 우려 요인은 2024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과도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7%에 그쳤다. 현재 CBAM은 기업의 추가적 준수 의무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응해 응답자의 3분의 1은 ESG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기업은 여전히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전반적으로, 2024년 서베이와 마찬가지로 탄소세와 에너지 소비세가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목으로 평가되었다.

CBAM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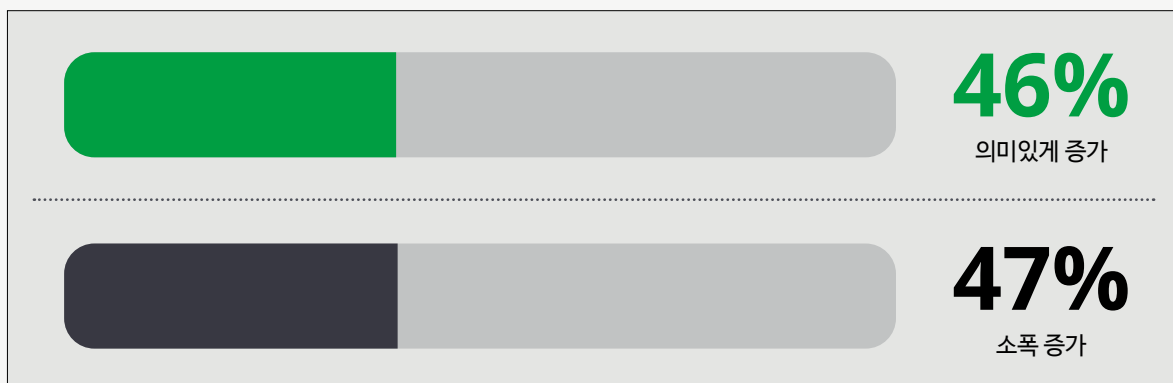


04. 국제 조세 개혁

올해 서베이에서는 OECD/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의 필라2(Pillar Two)에 대한 기업들의 경험과 기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2024년에 이어 필라2 시행이 세무 시스템의 복잡성을 얼마나 증가시킬지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다.

필라2로 인한 세부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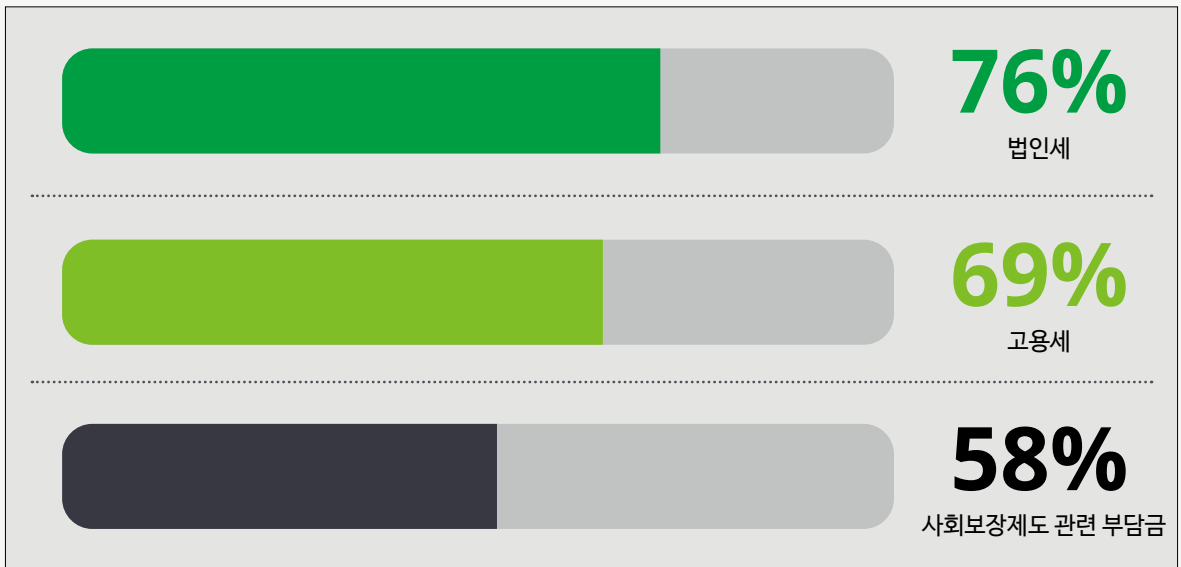
앞으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각국이 OECD 필라2 모델 규칙을 일관되게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신고 마감일을 포함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의 표준화가 필수 과제로 꼽혔다.

05. 일의 미래

국경을 넘는 원격 근무는 여전히 기업과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그 영향은 법인세, 고용세, 간접세 등 다양한 세목뿐 아니라 이민법 전반에도 걸쳐 나타나고 있다.

2024년에 이어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는 상설사업장(PE, permanent establishment) 발생 위험과 이전가격(transfer pricing)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다수의 세무 이슈가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주요 세무 이슈



이번 조사 결과는 팬데믹 이후 기업들이 국경 간 인력 이동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 이동 배치 모델을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모델의 확산은 세무 이슈를 보다 넓은 인사-인재 전략에 통합해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던지고 있다.

또한, 인재 유치를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징후도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3분의 2는 자국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유치를 위해 세제 인센티브나 특별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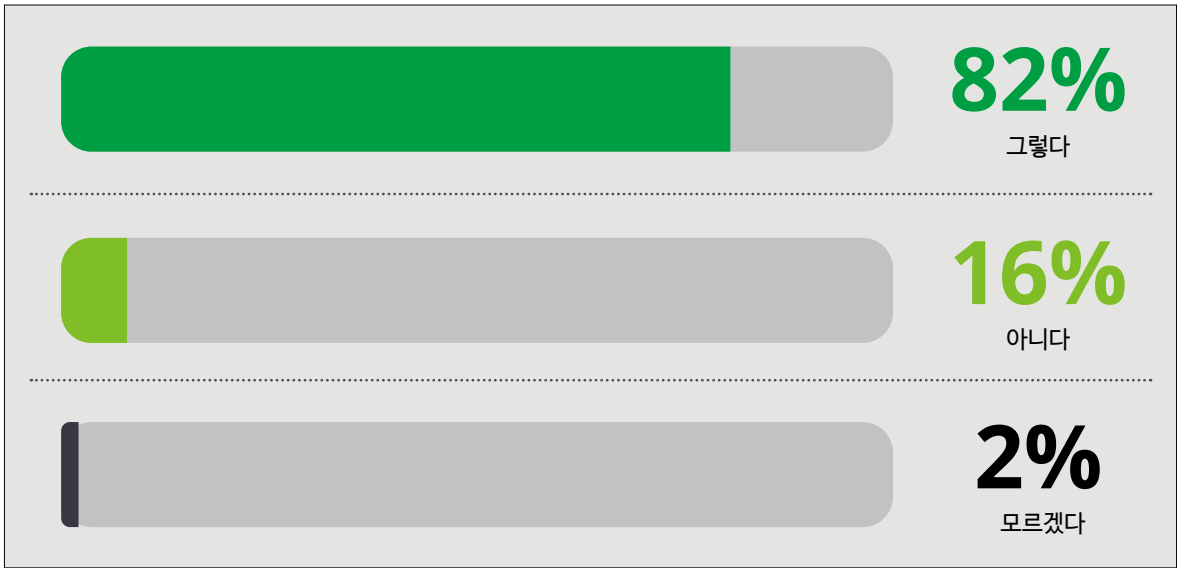
투명성 및 보고

Transparency and Reporting

투명성 및 보고는 여전히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로 자리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이번 조사에서도 2024년과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주제 중 비즈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를 꼽았다.

대다수 응답자는 향후 2~3년 내 세무 공시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특히 중동(91%), 아시아태평양(84%), 라틴아메리카(84%) 응답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글로벌 평균(78%)보다 높게 전망했는데, 이는 해당 지역 기업들의 현행 공시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공 세무 투명성 공시 확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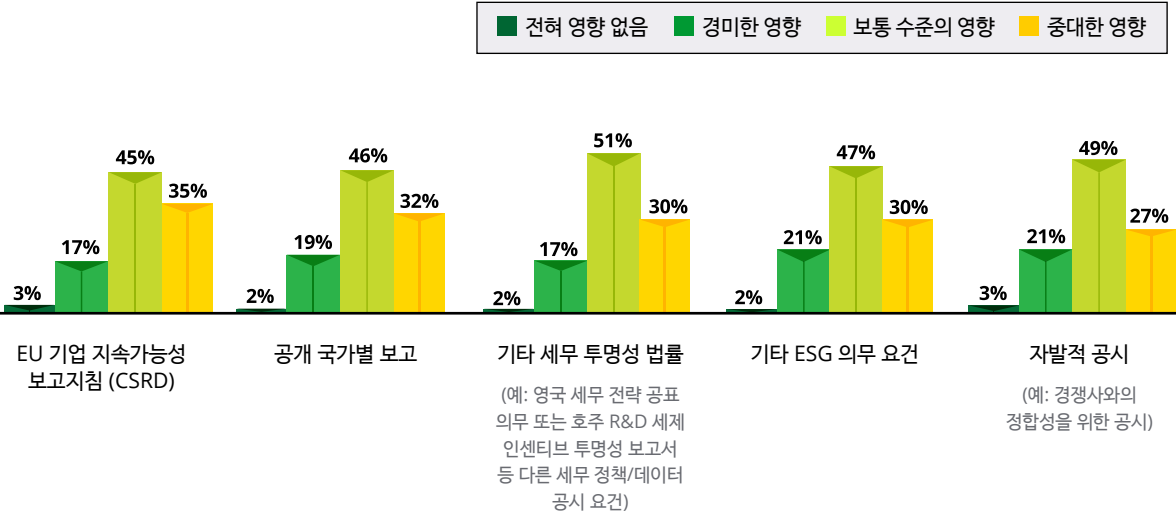
공공 세무 투명성 공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과 공개 국가별 보고(CBCR) 요건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각각 35%, 32%로, 세무 투명성 공시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제도로 평가되었다. ESG 보고 요건 역시 2024년에 이어 전체적인 보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1%)은 EU CSRD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9%는 현재 수준이 이미 요구 기준을 충족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응답자들은 해당 지침의 적용 대상이 아니거나, 세무 이슈가 중대성(materiality)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EU 집행위원회가 옴니버스 I 입법안을 통해 CSRD 적용을 일부 연기·축소하는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기 전에 실시되었기에, 내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반영될지가 주목된다.

CSRD와 같은 다자간 제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전체적으로는 개별 국가 차원의 투명성 관련 법률이 가장 큰 영향력(8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U 분류체계 규정(EU Taxonomy Regulation)의 세무 관련 최소 안전장치(minimum safeguard)에 대해서도 우려가 확인되었다. 응답자의 약 3분의 2는 EU 분류체계 규정의 세무 관련 최소 안전장치 3가지 측면 모두에서 우려를 표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기업들이 세무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79%)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으며, 중동 기업들은 기본 세무 의무 준수(71%)와 '법의 취지'(spirit of the law)를 이해하고 이행하는 것에 대한 불확실성(73%)을 주요 리스크로 꼽았다.

공공 세무 투명성 공시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전에 대한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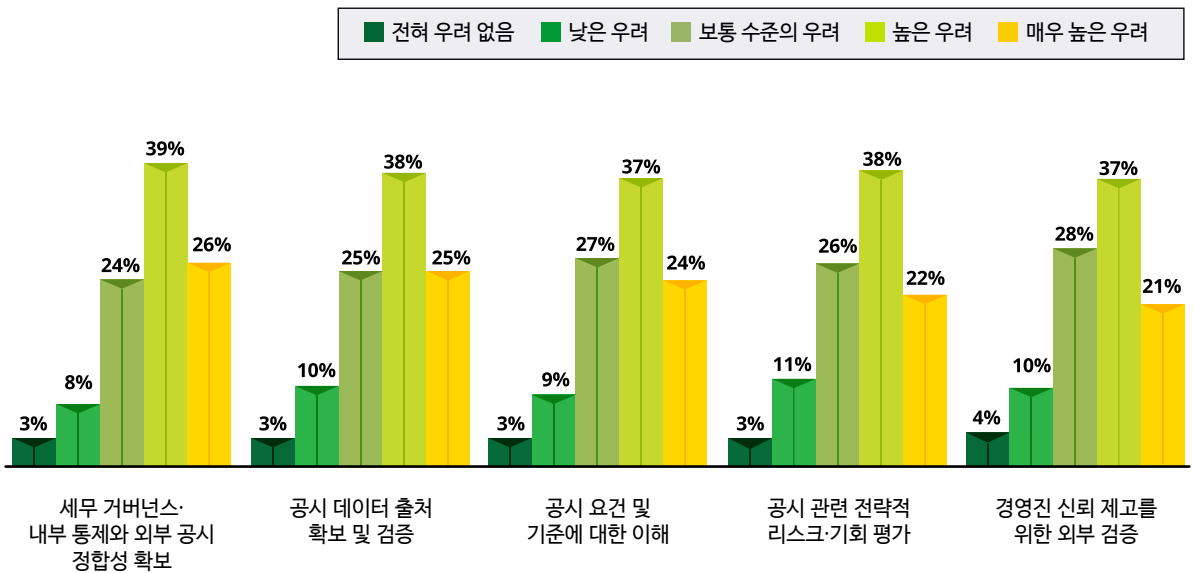
2024년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응답자들은 세무 투명성 전략을 수립하여 투명성과 보고 요구에 대응하고 있었다.

전략 실행에 대한 우려 수준은 전반적으로 2024년 조사 대비 소폭 완화되었는데, 이는 규제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고 호주의 공개 국가별보고(CBCR) 요건 일부가 완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전히 다섯 가지 주요 우려 영역 중 네 가지에서 60%의 응답자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 수준의 우려를 표명하였다. 특히 세무 거버넌스 및 내부 통제를 외부에 공개되는 메시지와 일치시키는 과제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세목, 관할권, 리스크 유형 전반에 걸쳐 견고한 통제 프레임워크를 갖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공공 세무 보고에 대한 외부 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응답자의 과반(57%)은 EU CSRD 및/또는 EU 분류체계 규정에 따라 외부 검증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고, 35%는 자발적으로 외부 검증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 응답자의 경우 이 비율이 47%로 두드러졌다.

세무 투명성 공시 실행 과제별 우려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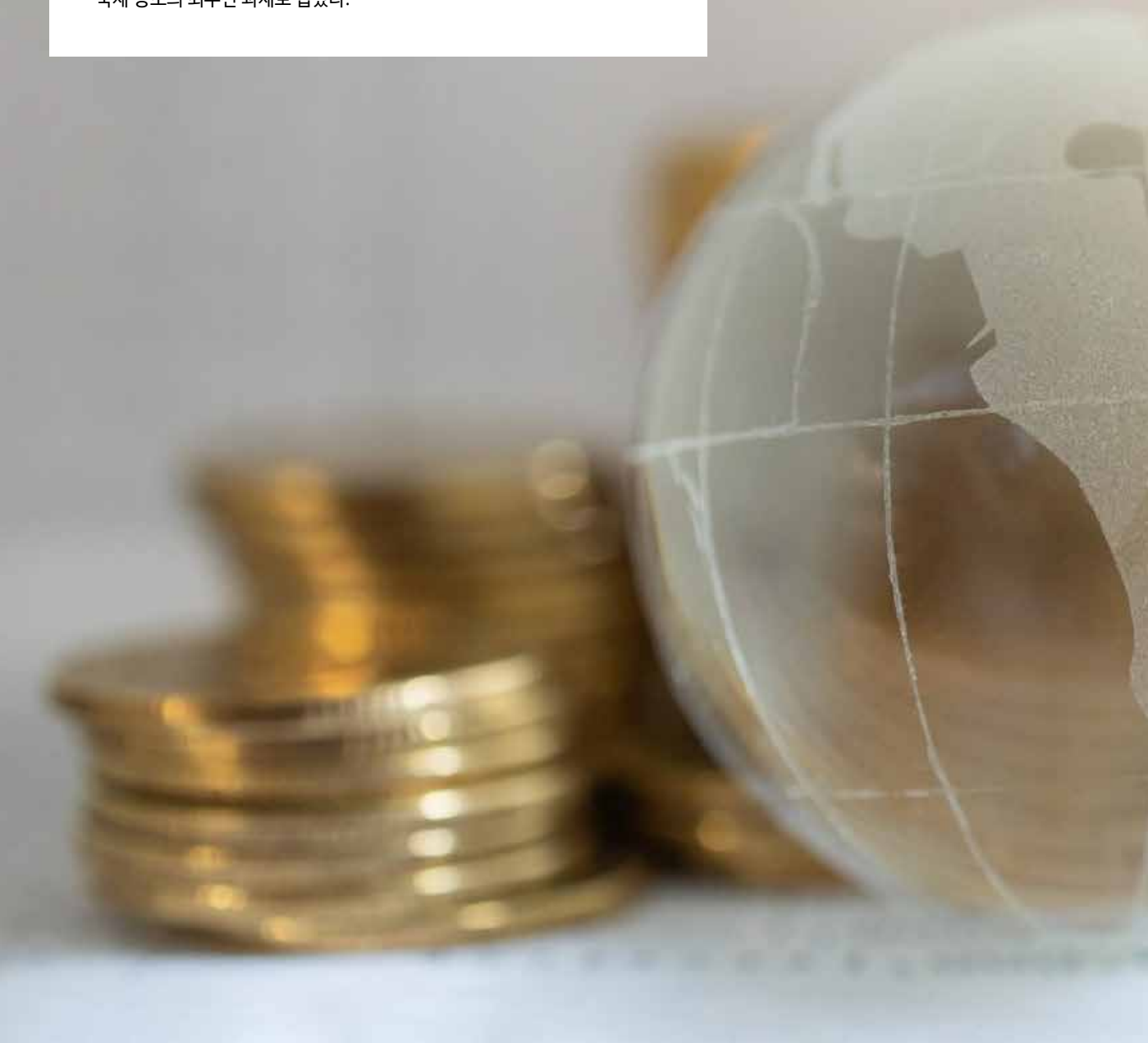


주요 동향

공개 국가별 보고(CBCR) 데이터는 AI 기반 분석의 확산으로 과거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검증과 문제 제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현상이 가장 먼저 세무당국(81%)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어 애널리스트(64%), 언론(50%), 비정부기구(NGO, 36%) 순으로 예상했다.

일관성에 대한 요구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분명한 메시지는, 기업들이 보고 의무가 부과될 때 '보고 제도의 일관성'(consistency)을 매우 중시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비율이 다국적기업(MNE)에 대한 보고 제도 시행의 일관성을 국제 공조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02

세무의 디지털화

Digitalization of Ta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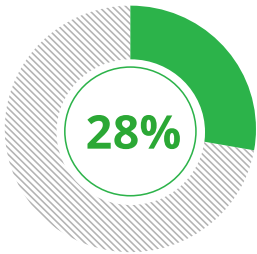
2024 서베이와 마찬가지로, 세무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 of Tax)는 전체적으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주제로 평가되었으며, 모든 지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주제' 상위 3위 안에 포함되었다.

세무행정 3.0 도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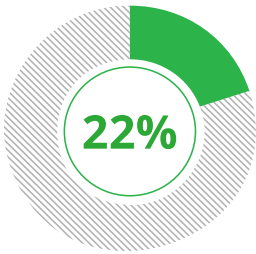
OECD의 세무행정 3.0(세무행정의 디지털 발전) 도입을 위한 자국의 움직임에 대해 질문했을 때, 응답자의 86%가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다고 답했다. '의미 있는 진전'(significant movement)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로, 2024년 13%에서 크게 증가했다. 2025년 서베이에에서 확인된 세무행정 3.0 도입의 기대효과는 2024년과 유사한 범위를 보였으나, 올해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약간 낮아졌다.

세무행정 현대화는 투명성과 보고 분야를 포함해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있다. 따라서 세무당국은 세무행정 3.0 모델의 이점을 기업에 알리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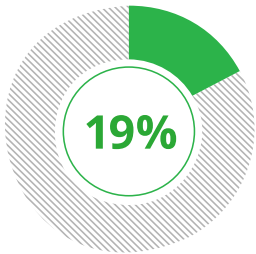
세무행정 3.0의 기대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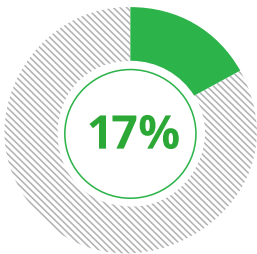
세무 당국과의
협력 관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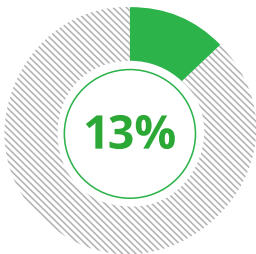
비용 및 복잡성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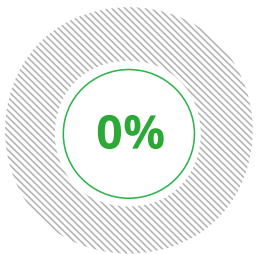
고객 서비스 개선



세무 준수에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감소



세무 조사(감사) 횟수
감소 및 효율성 증대



아무런 영향
없을 것으로 예상

세무행정 디지털화의 영향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무역·통관 요건 도입과 관련해, 응답자들은 가장 큰 긍정적 효과로 '세무 규정 준수의 단순화'(40%)를 꼽았다. 그러나 2024년 서베이와 비교했을 때 낙관적 전망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59%였던 '세무 준수 단순화'에 대한 기대는 40%로 하락한 반면, '세무 준수 복잡성 증가'를 예상하는 비율은 10%에서 26%로 상승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완전한 디지털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경고 신호로, 정책 입안자와 세무 당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의 부상

서베이는 AI 기반 세무 준수 시스템 확산에 대한 기대 또한 조사했다. 응답자의 약 5분의 1은 자국에서 이미 해당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고 답했으나, 여전히 상당한 수준의 인간 감독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사용 비율은 2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향후 3년 내 이러한 AI 활용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동 지역에서는 그 기대치가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업들은 AI 기반 시스템의 이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어느 한 영역에 대한 기대치가 두드러지게 높지는 않았다.

- ✓ 정확성 향상 (29%)
- ✓ 기업 전반의 세무 전략 일관성 제고 (21%)
- ✓ 규제 준수 강화 (21%)
- ✓ 핵심 기능에 대한 시간·자원 집중 (18%)
- ✓ 비용 절감 (11%)

2024년 대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비용 절감에 대한 기대치가 10%포인트 이상 하락한 점이었다. 다만, 이러한 추세는 라틴아메리카 지역 응답자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생성형 AI(gen AI)의 부상과 함께, 기업들은 전사적 차원에서 이 기술을 활용해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부 세무당국에서 세무행정 3.0 전환이 더디게 진행되더라도, 기업들은 선제적으로 AI를 도입·활용하여 세무 업무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AI 과세

현재 AI 관련 세무정책 논의는 주로 세무행정과 세무 준수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AI를 통해 창출되는 가치를 어떻게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베이는 이러한 AI 과세 논의가 기업 커뮤니티에 얼마나 확산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주제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했다.

세무행정 3.0의 기대 효과

논의 주제	인식 수준
AI 활용으로 발생한 이익 또는 가치에 대한 과세	79%
AI 관련 서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에 대한 과세	75%
AI로 대체된 일자리 종사자의 재교육· 재훈련 재원 마련을 위한 AI 로봇 과세	68%

이러한 결과는 AI 과세가 향후 핵심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으며, AI가 세무정책 의사결정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임을 시사한다.



03

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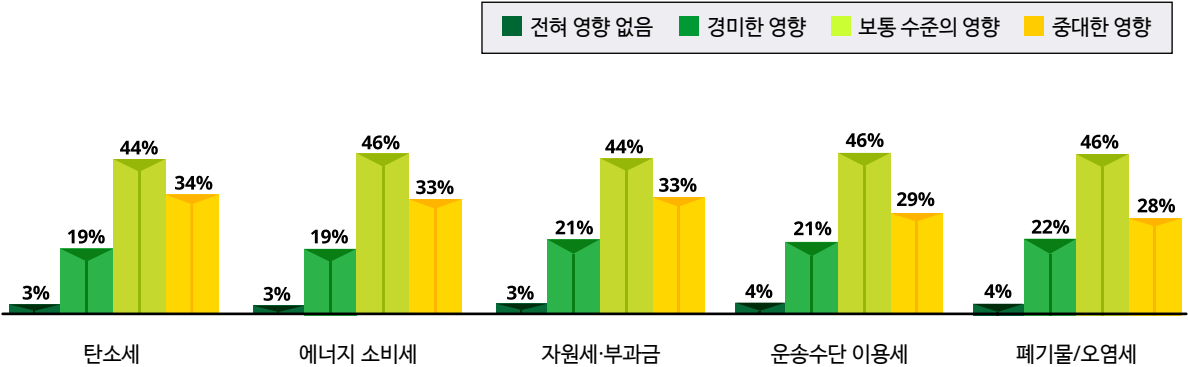
올해 지속가능성의 위상은 영향력 순위가 5위에서 3위로 상승한 데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응답자의 55%가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자사 비즈니스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으며, 특히 금융 서비스 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63%로 더 높게 나타났다.

세무 관점에서도 이 주제의 핵심성이 부각된다. 전체 응답자의 56%는 자사의 세무 조직이 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과정에 완전히 통합되어 있다고 답했으며, 금융 서비스 업종은 63%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보고 요건의 상당수가 ESG 영역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과 투명성 및 보고 간에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환경세의 영향

응답자들에게 다음 세목이 비즈니스와 운영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환경세 세목별 비즈니스 및 운영에 대한 예상 영향



응답자들은 탄소세와 에너지 소비세가 비즈니스와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목이라고 답했으며, 이는 2024년 조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제시된 모든 세목이 75% 이상의 응답자에게서 ‘보통 수준’ 또는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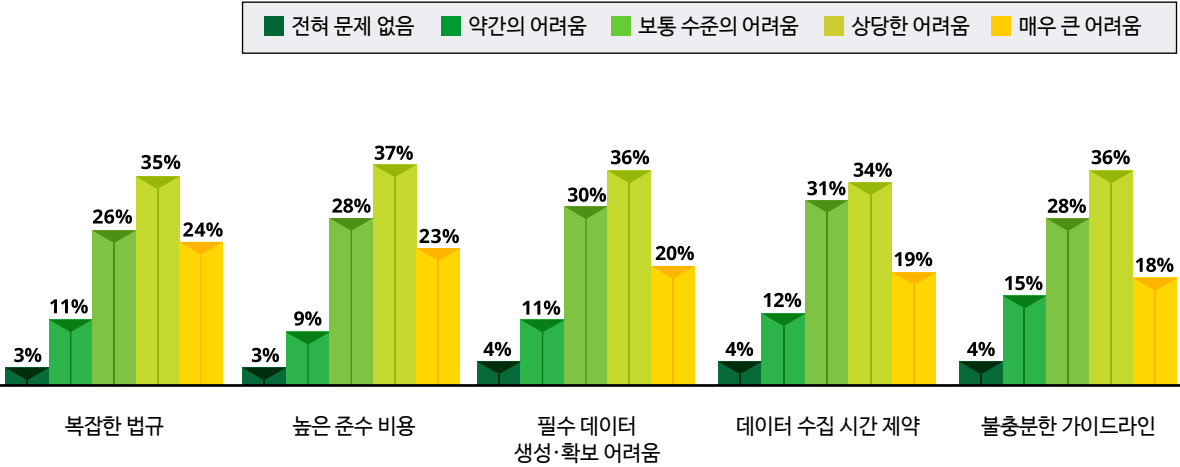
특히 아프리카 지역은 예외적인 양상을 보였다. 탄소세, 에너지 소비세, 자원세·부과금 전반에서 약 50%의 응답자가 ‘중대한 영향’을 예상했다고 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결과를 나타냈다.

한편 EU와 영국이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여전히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전체 응답자의 42%가 현재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는데,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EU CBAM뿐임을 고려하면 대부분 EU CBAM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50%는 향후 1~2년 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아프리카와 중동 응답자는 현재 영향 비율이 평균보다 낮았으나, 중동 응답자의 59%와 라틴아메리카 응답자의 58%는 향후 영향을 예상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현재 영향 수준이 낮은 데 따른 기저효과(base effect)로 풀이된다. 주목할 점은 EU CBAM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단 7%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EU/영국 CBAM의 구체적 영향과 관련한 주요 과제는 2024년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45%가 준수 비용(compliance cost)을 가장 큰 과제로 꼽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2025년 2월 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EU CBAM에 대한 여러 간소화 방안을 제안하기 이전에 진행되었다. 따라서 2026년 조사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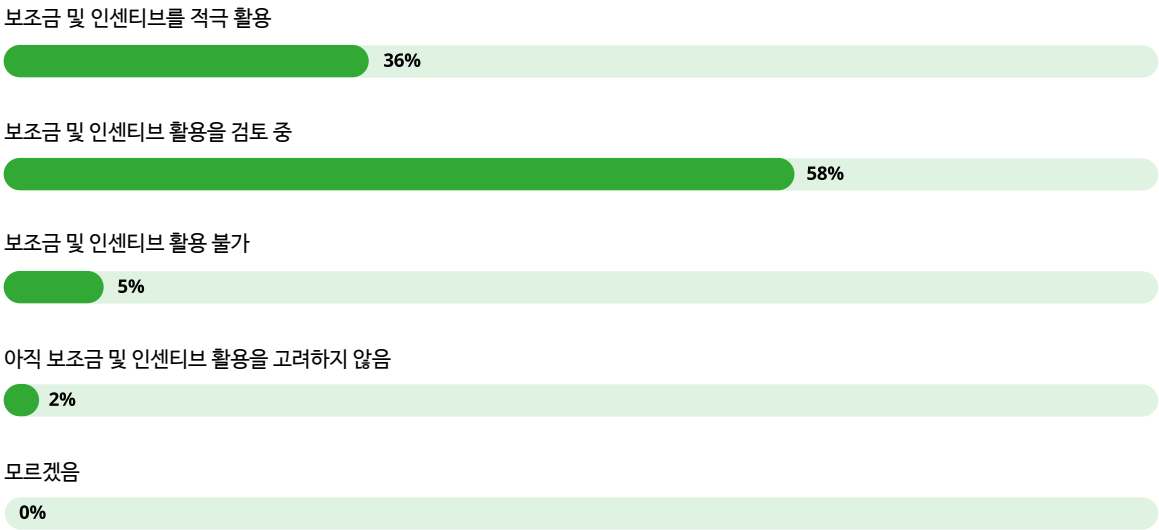
EU/영국 CBAM 관련 주요 과제 평가



과제 관리

응답자의 3분의 1(36%)은 ESG 관련 투자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활용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가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특히 싱가포르(57%), 호주(45%), 핀란드(45%)의 응답자들은 이러한 보조금과 인센티브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ESG 관련 투자 비용 상쇄를 위한 보조금 및 인센티브 활용 현황



04

국제 조세 개혁

International Tax Re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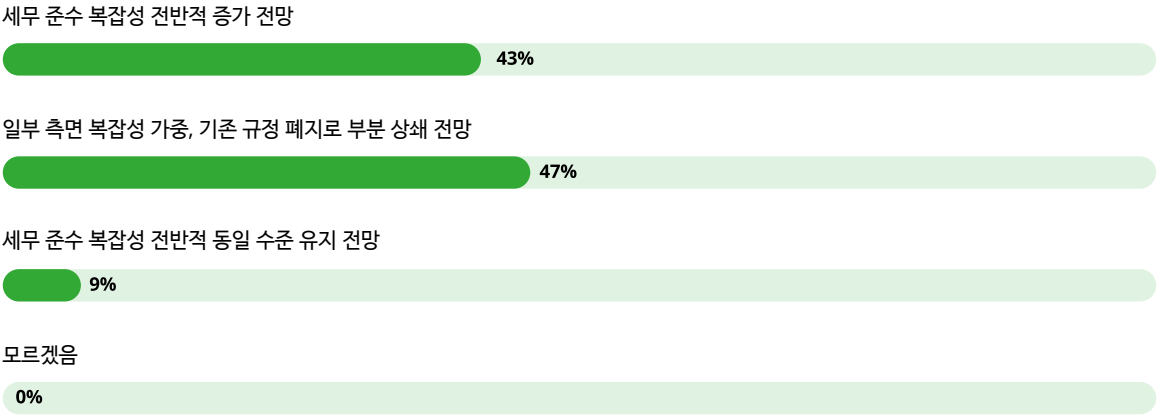
미국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세원 감식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대책(BEPS)의 두 필라(Two Pillar)¹ 프로세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하면서, 국제 조세 개혁 시행이 다소 불확실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가에서 제도 도입이 이미 본격화되고 있어, 이는 여전히 전 세계 기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서베이에서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²)의 두 필라 솔루션 하에서 마련된 다양한 정책 조치들이 기업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필라2의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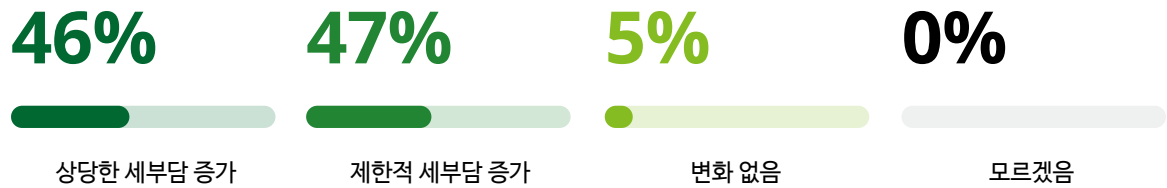
2024년과 마찬가지로, 필라2(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응답자의 43%는 필라2가 세무 시스템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비율은 아프리카(53%)와 유럽(51%)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북미(37%)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응답자의 47%는 일부 준수 의무 측면에서 복잡성이 증가하겠지만, 기존 규정의 일부가 폐지되면서 일정 부분 상쇄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복잡성이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답한 비율은 9%에 불과했다.

필라2가 기업 세무 준수 복잡성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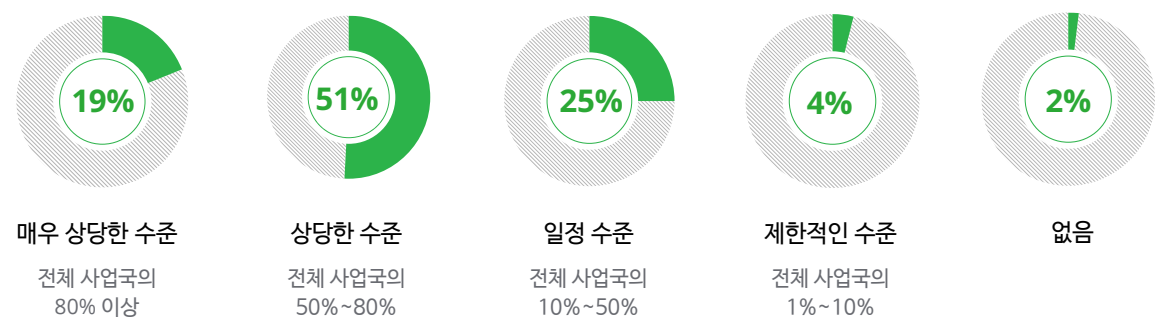
필라2가 전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은,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와 제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자로 양분되었다.

필라2가 전체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예상



필라2 시행의 실제 영향은, 도입 초기 단계에서 제안된 전환기 국가별 보고 안전장치(Transitional CBCR Safe Harbor)를 다국적 기업(MNE)이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대부분의 기업이 크든 작든 이러한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해당 기간 동안 기업이 직면하는 세무 준수 부담을 상당히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환기 국가별 보고 안전장치의 혜택에 대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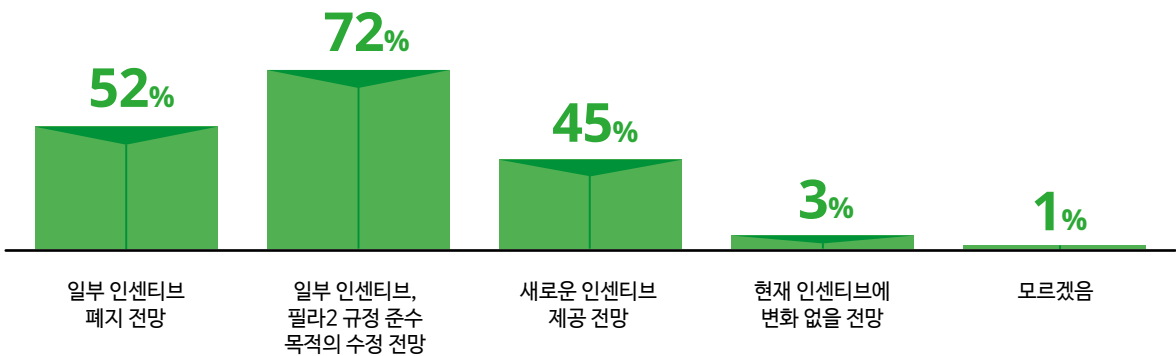


필라2와 조세 경쟁

필라2의 도입은 세율과 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경쟁 여지를 줄임으로써, 글로벌 조세 경쟁의 양상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각국은 산업 지원과 투자 유치를 위한 비(非)세제 기반의 새로운 경쟁 수단을 적극 모색할 가능성이 크며,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 활용이 중요한 전략으로 부상할 것이다.

응답자들은 인센티브 변화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보였으며, 그중 다수(72%)는 현재 활용 중인 일부 인센티브가 필라2 요건에 맞도록 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응답자의 79%가 기존 세제 인센티브의 일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았고, 64%는 일부 인센티브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중동 지역 응답자들은 자국 비즈니스에 적용 가능한 새로운 인센티브 출현에 가장 낙관적인 시각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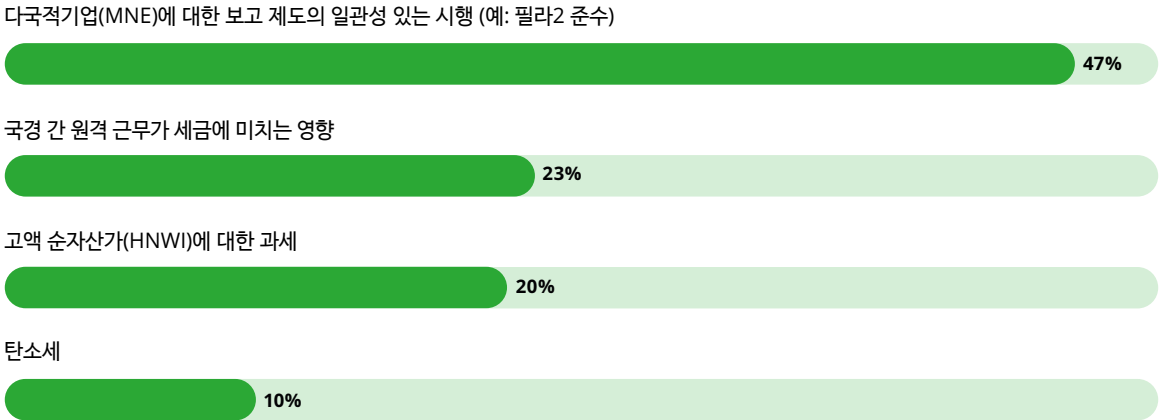
필라2 도입이 기업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



국제 조세 개혁의 향후 초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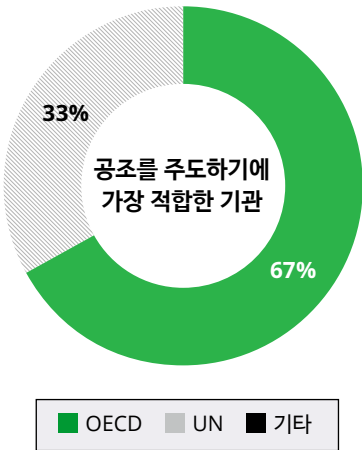
이번 서베이에서는 응답자들에게 향후 국제 공조의 초점과 이를 주도할 국제 기구에 대해 물었다. 향후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국경 간 원격 근무나 탄소세와 같은 개별 정책 이슈보다 보고 요건 이행의 일관성 확보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아프리카에서는 66%가 일관성을 가장 중시한 반면, 중동에서는 36%로 낮은 편이었으며, 대신 중동 응답자들은 국경 간 원격 근무의 세무적 영향에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29%)을 부여했다.

국제 공조의 최우선 세무 관련 과제



국제 조세 개혁의 향후 공조 체계

최근 수년간 국제 조세 개혁 논의는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가 주도해왔으며, 동시에 유엔(UN)도 자체적인 조세 프레임워크 개발을 적극 추진해왔다. 향후 국제 공조를 이끌기에 가장 적합한 기구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약 3분의 2가 OECD를 선택했다. 지역별로 보면 아프리카에서는 95%가 OECD를 지지한 반면, 라틴아메리카에서는 UN이 48%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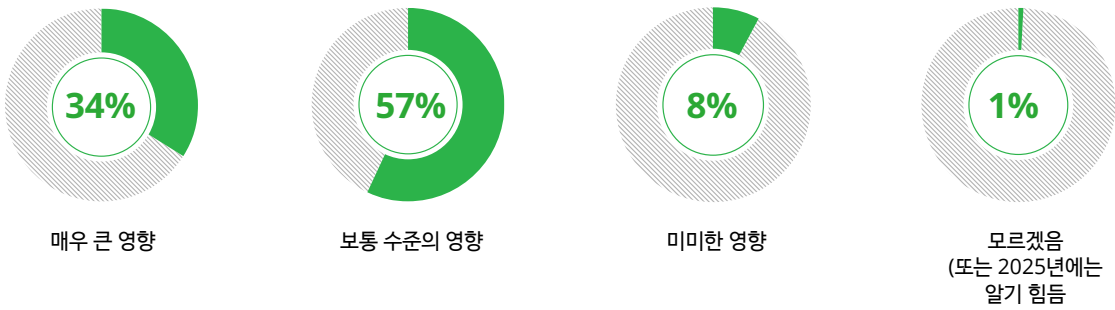


관세의 부상

2025년 국제 조세 개혁 논의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흐름 중 하나는 관세가 조세 정책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글로벌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 기존의 조세 조치에서 관세로 대체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번 조사는 2025년에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비관세 무역 장벽이 도입될 경우 기업에 미칠 잠재적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물었다.

2025년 관세 인상 및 비관세 무역 장벽의 기업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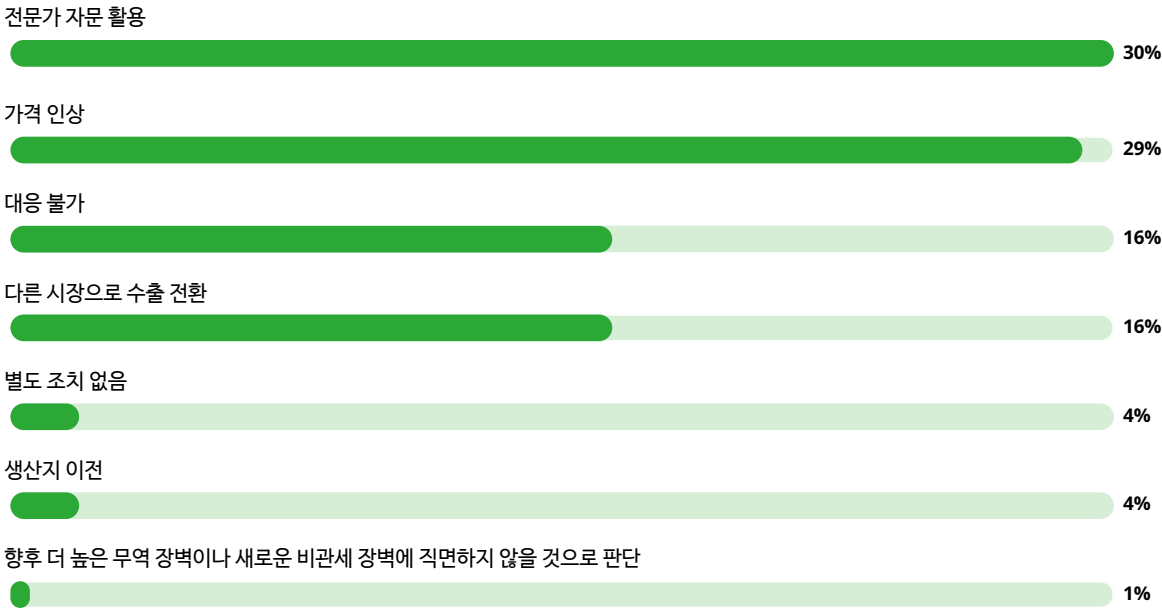


응답 결과, 과반수의 선택을 받은 대응 방안은 없었다. 약 3분의 1은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 뒤를 이어 가격 인상(29%), 생산 이전 고려(16%), 대체 시장으로의 수출 전환 고려(16%)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소비자재 부문에서는 세무 전문가 자문을 받는 비율이 평균보다 높은 39%였고, 에너지·자원·산업(ERI) 부문은 28%로 다소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기민한 대응은 2025년 글로벌 조세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 인상 또는 새로운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기업의 잠재적 대응 방안



05

일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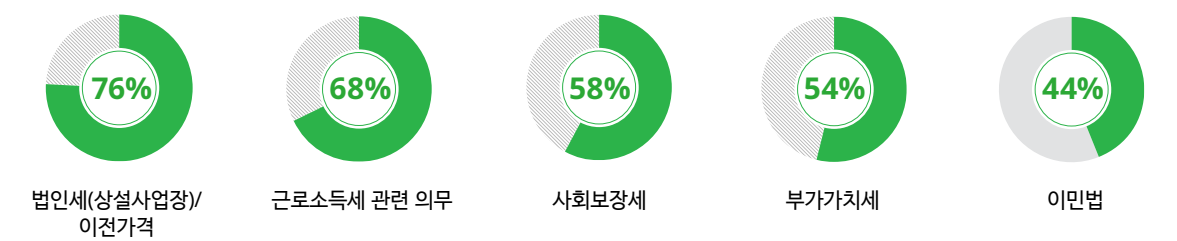
Future of Work

모바일 근무 방식(Mobile working practices)³의 변화는 기업과 정책 입안자 모두에게 새로운 세무상의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장기·단기 국제 파견과 같은 전통적인 인력 이동(traditional mobility)에 대한 대응 방안은 이미 잘 확립되어 있지만, 국경 간 원격근무(international remote work)를 포함한 비전통적인 인력 이동(non-traditional mobility)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국경 간 복잡성을 불러오고 있다.

국경 간 원격근무의 영향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규제 영역은 2024년 서베이와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주요 관심사(76%)는 이전가격 문제와 상설사업장 발생 위험 등 법인세 관련 사안에 집중되어 있다.

가장 우려되는 규제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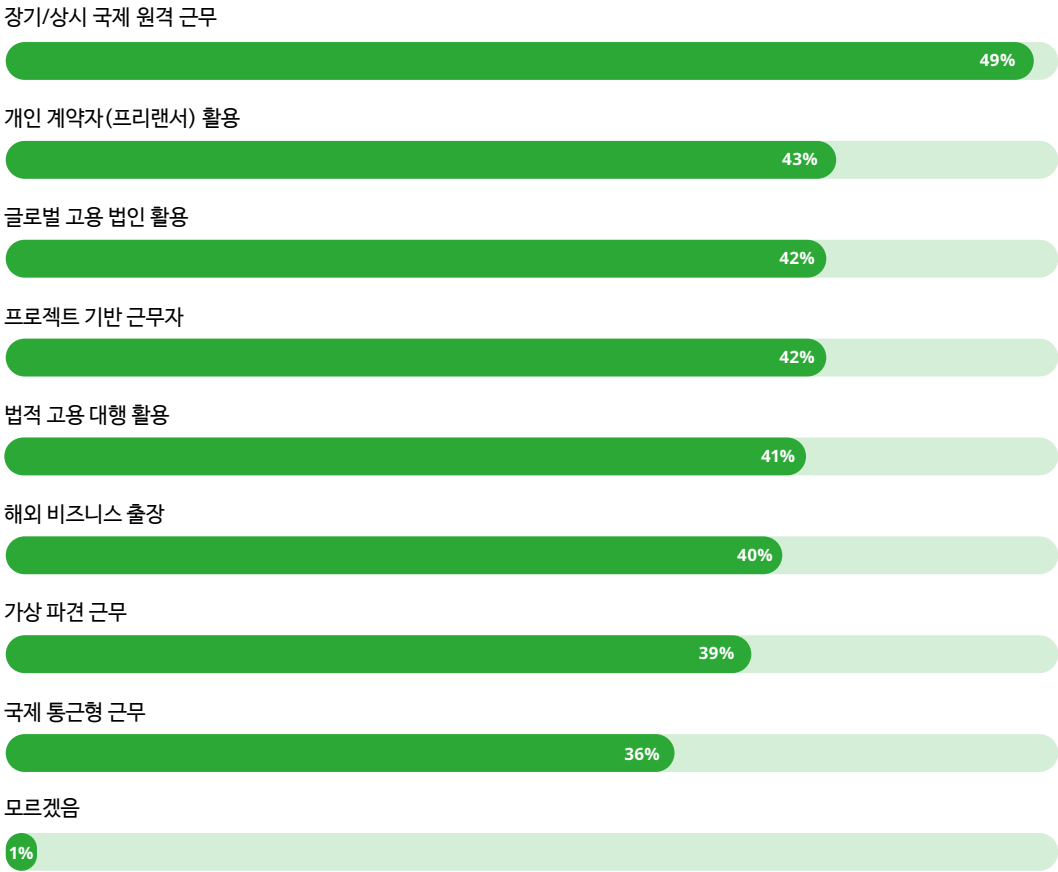


인력 이동 배치 모델의 다양화

비전통적 인력 이동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번 조사는 응답자들이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국경 간 근무 및 인재 배치 모델을 살펴보았다. 글로벌 팬데믹 이후 이러한 모델은 다양하게 확산되었으며, 조직별로 차별화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모델의 형태는 전통적인 통근 및 출장부터, 그룹 내에 설립된 법인 형태의 글로벌 고용회사(Global Employment Company), 또는 제3의 서비스 제공자가 법적 고용주로서 해당 근무지에서 '고용주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고용 대행(Employer of Record)까지 매우 다양하다.

기업들이 활용하는 국경 간 근무 및 인력 배치 모델 (전통적 인력 이동 제외)



조사 결과, 특정 모델이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았다. 이는 기업이 민첩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든, 근로자가 유연한 근무 방식을 선호해서든, 인력 이동이 발생하는 상황이 다양함을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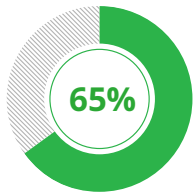
앞으로 기업에게는 인력 이동 모델 의사결정에 세무 전문성을 결합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떠오를 것이다. 이를 통해 인재 및 인력 이동 전략 수립 시, 보다 광범위한 세무 리스크를 전략적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인력 이동과 인센티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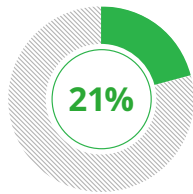
현대 노동시장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는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의 활용이다. 특히 고숙련 분야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

응답자의 65%가 이러한 인센티브 활용이 증가했다고 보고했으며, 반대로 21%는 자국에서 활용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태평양(71%)과 유럽(69%) 응답자들이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활용이 가장 활발하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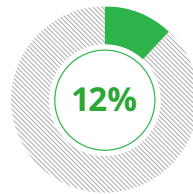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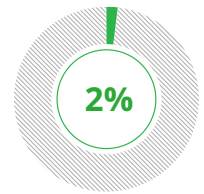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특별 세제 활용 증가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특별 세제 활용 감소



증감 변화 없음



외국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특별 세제가 없음

향후 협력 과제

향후 단기 및 장기 국제 원격근무 관련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OECD의 지원이 유용할 분야에 대해 물었으나, 제시된 항목 가운데 뚜렷하게 높은 선호도를 보인 분야는 없었다. 다만 아프리카 응답자의 48%는 상설사업장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고 답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국제 원격근무 관련 과제 해결을 위한 OECD의 주요 지원 필요 분야

재택근무로 인한 상설사업장의 성립 여부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26%

소규모 또는 '기술적' 상설사업장이 복수로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

26%

세이프 하버 기준(Safe harbour threshold) (예: 상설사업장이 생성되지 않고 허용되는 국가 내 체류 일수/활동 유형)

21%

단기 파견자의 근로소득 면세 규정과 유사한, 현지 사회보장 부담금 면제 조항

16%

보다 간소화된 행정 절차

11%

* "소규모 또는 '기술적' 상설사업장은 통상적으로 제한적인 이윤만 발생시켜 과세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음

결론: 미래를 향한 방향 설정

2025년 글로벌 세무정책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 속에 놓여 있다. 국제 조세 개혁의 재편, 정책 수단으로서의 관세 강화, 그리고 인공지능의 발전은 기업과 세무당국 모두에게 새로운 변수이자 도전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기존의 정책·운영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며, 향후 글로벌 조세 지형을 결정지을 핵심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변화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미 정착된 프로세스와 익숙한 과제들은 여전히 기업의 일상적 과제 속에 존재하며, 안정성과 연속성 또한 뚜렷하게 유지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글로벌 세무정책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조사된 다섯 가지 주요 주제 전반에서 기존 제도의 진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과거부터 반복되어 온 과제 역시 여전히 중요한 정책·운영 의제로 남아 있다.

이처럼 급격한 변화와 안정적 연속성이 공존하는 복합적 환경은 기업과 세무당국 모두에게 특별한 도전을 제시한다. 단일한 전략으로는 모든 글로벌 세무정책 분야에 대응할 수 없으며, 오히려진화(evolution)와 혁신(revolution)을 병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전략적 초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안정적 흐름을 보이는 기존 제도와 프로세스 가운데 긍정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부분은 더욱 강화하되, 비효율적이거나 방향 전환이 필요한 부분은 선별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둘째,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두드러지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과 세무당국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안정적 요소를 발판으로 삼으면서, 변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각 기업이 속한 지역적 특성과 운영하는 시장의 조건에 따라 구체적인 해법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이 있다. 바로, 세무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고 명확한 전략적 시각을 갖추며, 적극적으로 정책 논의와 제도 발전에 참여하는 자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 각국의 조직들은 광범위한 불확실성에 대응하면서, 급변하는 관세 환경이라는 복잡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무 조직이 겪고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변화를 따라잡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세무 리더들은 조직 전반과 협력하여 현재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그에 도달하는 방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아만다 티켈(Amanda Tickel)
딜로이트 글로벌 세무·법무정책 리더

“이번 서베이는 글로벌 세무정책의 이중적 현실을 보여줍니다. 규제 요건과 투명성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최우선 과제이지만, 디지털화와 같은 새로운 우선순위가 세무 환경을 재편하고 때로는 복잡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무 환경이 계속 진화함에 따라, 기업들은 장기적 성장과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접근을 선제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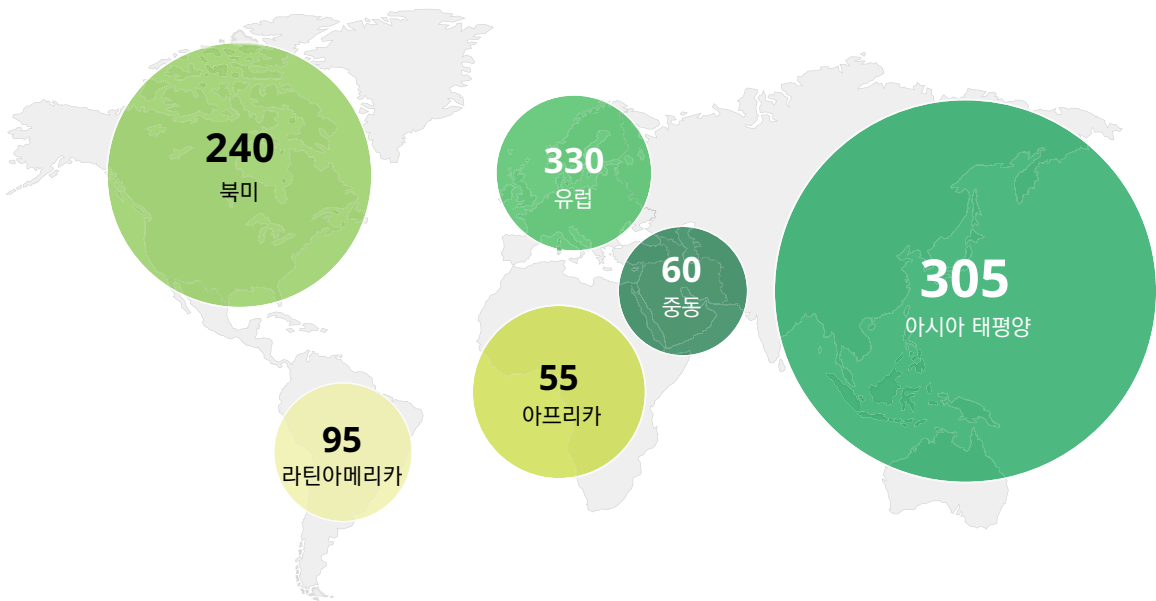
빌럼 블롬(Willem Blom)
딜로이트 글로벌 세무·법무 리더

연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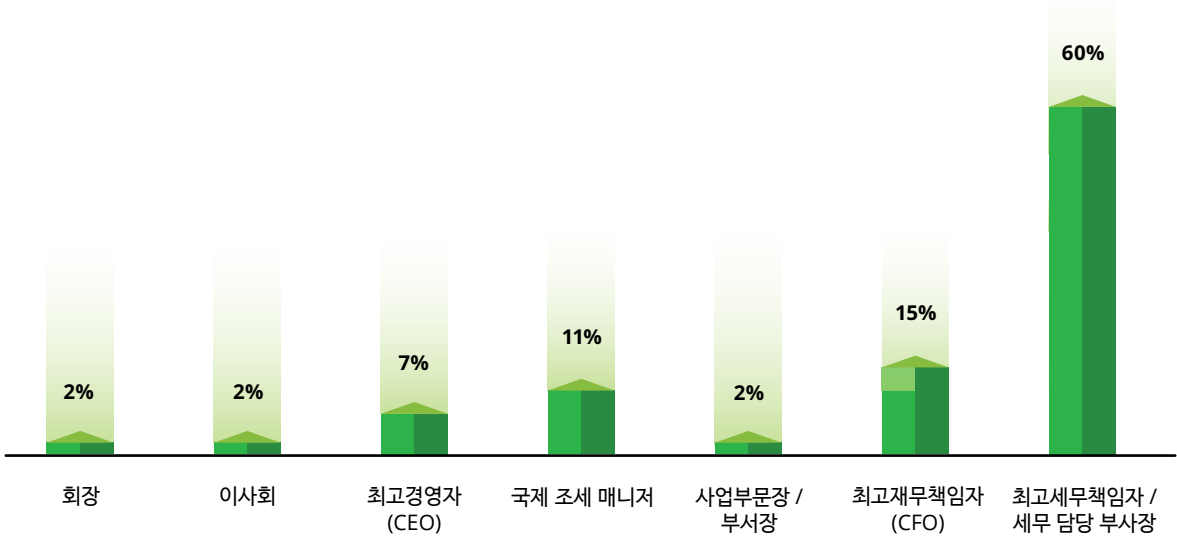
딜로이트는 2025년 1월부터 3월까지 전 세계 28개국에서 1,100명 이상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65%는 세무 리더, 26%는 최고재무책임자(CFO), 8%는 기타 임원으로 구성되었다. 산업별 비중은 소비재 산업(26%), 에너지·자원·산업재(20%), 기술·미디어·통신(24%), 금융 서비스(20%), 생명과학·헬스케어(10%) 순으로 차지했다.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은 모두 직전 회계연도 기준 최소 1억 달러 이상의 글로벌 연간 매출을 기록했으며, 이 중 90%는 두 개 이상의 국가에서 5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다국적 기업이었다. 이번 조사의 목적은 다양한 세무정책 개혁과 트렌드에 대한 기업들의 견해, 우려, 그리고 대응 행동을 살펴보는 데 있다.

아래는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 매출 규모별 기업 규모, 직책 및 역할별 분류 결과를 보여준다.

응답자 지역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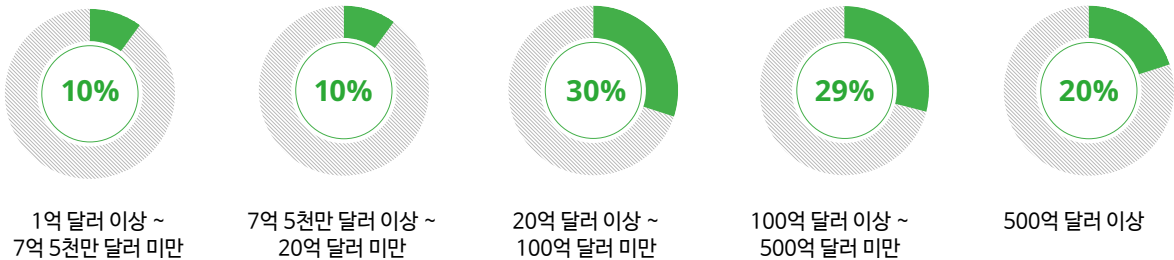
응답자 직책 분포



세무·재무 의사결정 책임 수준



응답 기업 매출 규모(미화 기준)



주석

1.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에서 합의된 국제 조세 개혁 방안으로 필라 1(Pillar One)은 초국적 기업의 이익 배분 규칙 개편, 필라 2(Pillar Two)는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함
2. OECD와 주요 20개국(G20)가 주도하는 다자 협의체로, 140여 개국이 참여해 BEPS 대응 및 Two Pillar 개혁의 설계·이행을 논의
3. 모바일 근무 방식(Mobile working practices)은 장기·단기 해외 파견 등 전통적 인력 이동(Traditional mobility)과, 국경 간 원격근무 등 비전통적 인력 이동(Non-traditional mobility)을 포괄하는 개념

한국 딜로이트 그룹 산업 전문가

세무자문부문 (Tax & Legal)

세무자문부문은 국내·외 조세 규정과 국제 조세 이슈 등을 분석하고 딜로이트 글로벌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객이 세무 관련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세무자문부문은 기업 세무, 국내·외 투자 자문, 기업 인수·합병 자문, 이전가격자문, 회계 및 세무 아웃소싱, 해외파견 임직원 세무 및 과세자문 등의 다양한 세무 분야에서 차별화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권지원 대표

세무자문부문 대표

☎ 02 6676 2416
@ jekwon@deloitte.com



구현모 파트너

Tax Technology Consulting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126
@ hygoo@deloitte.com



이용찬 파트너

이전가격 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828
@ yongclee@deloitte.com



이신호 파트너

국제 조세 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375
@ shinlee@deloitte.com



최승웅 파트너

기업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517
@ seungchoi@deloitte.com



임홍남 파트너

기업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336
@ honglim@deloitte.com



서민수 파트너

해외 파견 임직원 세무자문 그룹 |
세무자문부문

☎ 02 6676 2590
@ mseo@deloitte.com



앱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ownload on the
App StoreGET IT ON
Google Play

Deloitte.

Insights

성장전략부문 대표

손재호 Partner
jaehoson@deloitte.com

딜로이트 인사이트 편집장

박경은 Director
kyungepark@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연구원

김혜련 Senior Manager
hyerykim@deloitte.com

디자이너

박근령 Senior Consultant
keunrpark@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